

**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**  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7. 13.

발 의 자 : 백혜련 · 강민정 · 고용진

김병주 · 김승남 · 김태년

양경숙 · 이인영 · 최기상

최종윤 의원(10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노인의 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만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노인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일자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실태조사에 노인의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5조).

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“관계”를 각각 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”으로 한다.

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노인의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노인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	제5조(노인실태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<u>노인의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<u>관계</u>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관계</u>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관계</u> <u>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</u> <u>단체의 장, 관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계 중</u> <u>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</u> <u>체의 장, 관련</u>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